

절차_추시현(수정)

👤 Created By	
👥 Stakeholders	
▼ Status	
▼ Type	
🕒 Created	@2023년 1월 18일 오후 11:22
🕒 Last Edited Time	@2023년 1월 18일 오후 11:22
👤 Last Edited By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절차

투명

step 01

신속확인 대상 검토

기존제도 가능여부 검토



신속확인 준비

step 02

신속확인

신속확인 신청



신속확인심의위원회 심의



신속확인서 발급

step 03

사후관리

변경승인

유효기간 연장

이의신청

기준제도 기준마련

기본

step 01

신속확인 대상 검토

기존제도 가능여부 검토



신속확인 준비

step 02

신속확인

신속확인 신청



신속확인심의위원회 심의



신속확인서 발급

step 03

사후관리

변경승인

유효기간 연장

이의신청

기존제도 기준마련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절차는 **신속확인 대상 검토**, **신속확인 준비**,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속확인 대상 검토를 위해 **기존제도 가능여부**를 검토합니다. 제품이 기존 인증제도에서 평가가 가능한지 판별하는 것으로 평가가 가능하지 않으면 신속확인 대상이 됩니다.

신속확인 대상임을 통보받은 기업은 **신속확인 준비**과정으로 신속확인 신청을 위한 보안점검이 필요합니다. 보안점검은 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기능시험 추진이 있습니다.

취약점 점검을 통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을 통한 해당 제품의 취약점 분석·평가합니다.(정보보호산업법 제23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안전한 코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 원칙 준수하는지 진단합니다.(전자정부법 제45조)

마지막으로, 기능시험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소프트웨어 품질증명(GS) 인증이 있으면 기능시험은 면제됩니다.

신속관리 대상검토가 모두 완료되면,

신속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확인서 등 신청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속확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제품의 검토결과와 기업 발표를 통해 심의·의결합니다.

심의결과가 적합한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인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마지막 절차인 **사후관리**는 변경승인, 유효기간 연장, 이의신청, 기준제도 기준마련으로 나누어집니다.

변경승인은 제품 변경 시 다시 진단하는 것으로 취약점 점검과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을 통해 결과 확인 후 변경이 승인됩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이 만료에 가까울 때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 인증제도를 검토해 취약점 점검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2년마다 가능합니다.

신속확인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제도 기준마련은 신속확인 제품이 보안인증 기준이 마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연장을 불가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종료됩니다. 또한, 정식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출처

보안 규제 개선으로 혁신전 신기술 서비스 공공도입 촉진(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제도 개선 : 신속확인제 도입)/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bbsSeqNo=94&nttSeqNo=3182039>

정보보호산업(신속확인 소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

<https://www.ksecurity.or.kr/kisis/subIndex/552.do>

신기술 정보보호제품도 공공부문 활용...정부 신속확인제 도입/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2098100017?input=1195m>